민주 상임위원장 '지도부 겸직·전직 장관' 제외

의총서 인선 기준 교통정리…예결위는 예외 적용 검토
정청래 의원 수용 의사…14일 본회의서 6곳 선출키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5개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을 위한 교통정리를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당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 당 최고 의사 결정 기구 소속 당직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장관 이상 고위정무직 또는 원내대표를 지낸 사람도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선수(選數) 및 나이와 더불어 본인 희망, 지역 특성, 전문성 등도 두루 고려해 인선한 뒤, 14일 의원총회 보고 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날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장 기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지는 않았다"며 "여러 의원들이 원내지도부가 마련한 기준을 다 같이 받아들이고 빠르게 논의를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밝혀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 상임위 6곳(교육·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의 위원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본회의 표결 직전 보류했다.

원내대표나 장관 출신, 또는 지도부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이 '기득권 나눠 먹기'라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원내지도부는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해왔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위원장 후보군은 재선군으로 내려간다. 이상헌 김철민 서삼석 박재호 김두관 의원 등이 선순위 후보에 오른다.

다만 예결위원장의 경우 이날 본격 논의되진 않았으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총지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3선 이상의 중진 또는 현 21대 국회가 아닌 이전 국회에서 당직을 맡았거나 위원장을 역임한 사람도 후보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안위원장 내정자였다가 선출 보류에 강력 반발해 온 정청래 최고위원은 새 기준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의총에서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선당후사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저는 자리 보다 의사 결정 과정을 원했다"며 "상임위원장(선출의) 유권자인 국회의원 선택을 받지 못했다.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승복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최고위원은 위원장 선출 기준 추인 후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당사자들에게 매우 아쉬운 일이 될 수도 있을텐데, 당의 단합과 국민 신뢰 회복을 염두에 두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처리해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의총 후반부에선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재명 대표와 혁신기구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이 원내대변인은 "최근 국회의원과 사무처에 대한 검찰의 무리하고 무도한 압수수색, 강제 수사에 대한 문제점이 주로 논의됐고, 혁신위의 역할 정립과 인선을 잘해서 쇄신과 혁신의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혁신기구를 둘러싼 당내 시각차와 관련해선 "오늘 의총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것들을 지도부가 잘 이해하고 반영해 혁신위의 인선과 역할 정립, 규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의총에서 비이재명(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혁신 방안으로 현역 의원의 기득권 혁파 이야기를 친명(친이재명) 쪽이 자꾸 한다"며 "혁신위가 뭘 하는 기구인지 합의하지 않고 '론칭'부터 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1년을 평가해야 한다. 병을 고치려면 엑스레이도 찍고,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봐야 한다"며 "이런 것 없이 기득권 혁파, 대의원을 없애겠다는 것은 방향이 다르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日 오염수 방류 시운전, 尹정부만 묵인"

민주 의총서 성명서…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 조치 청구 등 요구

일본이 1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시운전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대응을 비판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에)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건 물론이고, 일본 현지 주민들과 인접한 중국·홍콩·대만 같은 나라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희한하게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명확하게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을 표명해야 하고,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가 당장 오늘 시운전에 들어간다. 시간이 없다. 절대 다수 모든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며 "'지은 죄도 없이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은 심정'이라는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 보고서가 나온 뒤 국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실시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검증을 무력화하는 시간 끌기용 꼼수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대국민 서명이 70만 명을 넘었다"며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청문회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성명서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지를 위한 잠정 조치 청구 ▲방사선 오염수 투기 설비 시운전 즉각 중단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검증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가동 및 청문회 개최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아들의 '암호화폐 업체 임원 재직' 보도 등을 고리로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김 대표는 엉뚱한 데 화풀이하지 말고, 자신과 가족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그동안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바란다"며 "떳떳하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으냐"고 쏘아붙였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양향자 신당 창당 추진…26일 발기인 대회

"호남 전 지역에 총선 후보 낼 것"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추진한다.

양 의원은 오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다.

양 의원은 12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단순하게 내년 총선을 목표로 하는 신당 창당은 아니다"면서 "신당의 키워드는 희망이다. 정치가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고 창당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역 의원 합류 여부나 신당 명칭·비전 등은 발기인 대회 당일날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투명사회 프로젝트를 목표로 당원 모집부터 공천, 후원시스템 등 새 플랫폼을 개발했다"면서 "기존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당의 틀을 만들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호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 보이겠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호남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고졸 여직원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해 상무까지 오른 양 의원은 지난 2016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의 인재 영입을 통해 정치권에 입문했다. 그해 20대 총선에서는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돌풍으로 당선에 실패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양 의원은 2021년 7월 보좌진의 성 추문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같은 해 12월 복당을 신청했지만, 이듬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당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지자체 해양관할구역 획정 원칙·기준 마련

주철현 의원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이 12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광역자치단체 17개 중에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 73개가 해양을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어업, 도서의 관할, 해저자원의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해상풍력 개발 등 해양 이용이 다변화되면서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지자체의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보니 관련 분쟁들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해결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정립하고, 해양 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와 획정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광록 기자 kroh@